

# 광주, AI·미래차 '성장' 4376억...교통망 '연결' 1조 배정

## 2026 '지방시대' 실행계획 확정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을 골자로 한 1조4700억원 규모의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기조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최근 '부강한 광주, 하나된 힘으로 도약하는 기회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2026년 광주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올해는 기존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이 아닌 정부 국정과제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판을 짰다.

## '5극 3특' 정부 전략에 맞춰 산업·인재·공간 다시 설계

### 1조4700억원 규모...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174개 과제 추진

올해 시행계획의 총사업비는 1조4701억원 규모다. 재원별로는 국비 5765억원(39.2%), 시비 등 지방비 5780억원(39.3%), 민자 3155억원(21.5%)이 투입된다.

시는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 등 3대 전략 아래 총 17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광주 중심의 생활·경제권 확장을 위한 '연결과 확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1조296억원이 배정됐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성장과 집중' 분야에도 4376억원(29.8%),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분권과 협력' 분야에 29억원(0.2%)이 각각 투입된다.

'성장과 집중' 전략은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시는 AI, 미래차, 반도체를 삼각축으로 설정하고 4376억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AI)을 위한 'AI 실증밸리 조성'과 에너지·로봇·가전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창업과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인다.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와 '스타트업 창업밸리'를 구축해 기술 창업을 지원한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

제(RISE)와 연계해 지역 대학과 기업을 잇는 한편, AI 영재학교 설립과 GCC(광주글로벌게임센터)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결과 확산' 전략은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잇는 광역 거점화가 핵심이다.

먼저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호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광주송정역 주변을 투자선도지구로 개발해 도심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망도 촘촘해진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공요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로복지 탄소흡수원 조성, 수소도

시 추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분권과 협력' 전략을 통해서도 지방 재정의 자립과 주민 자치 실현을 꾀한다.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강화해 읍면동 중심의 생활 자치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광주시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GRDP(지역내총생산), 전략산업 고용자 수, 광주-전남 청년 정주율, 출생·성주 연계지수, 지방재정 자율성 수준 등을 매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에 맞춰 광주만의 특색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다주택자 16만4000명 '사상 최대'

### 광주 6만1389·전남 10만2488명 무주택 55만2214가구

■ 거주지역/주택 소유물 건수별 주택소유자수 (단위:명)

| 시점   | 2건     |        | 3건 이상  |        |
|------|--------|--------|--------|--------|
|      | 광주     | 전남     | 광주     | 전남     |
| 2019 | 48,705 | 71,447 | 12,442 | 17,365 |
| 2023 | 49,107 | 80,571 | 11,459 | 19,111 |
| 2024 | 50,302 | 83,361 | 11,087 | 19,126 |

(자료: 국가데이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자를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다주택자가 16만 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한편, 지역 무주택 가구는 5년 새 1만3000가구 늘었다.

18일 국가데이터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전남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수는 16만3877명으로, 전년(16만248명)보다 2.3%(3629명) 늘었다.

광주 다주택자는 6만1389명으로 1년 새 1.4%(823명) 늘었고, 전남은 9만9682명에서 10만 2488명으로 2.8%(2806명) 증가했다.

광주에 살면서 광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24년 86.7%로, 조사를 벌인 201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 거주자의 전남 주택 소유 비율은 85.6%로, 세종(69.4%), 충남(82.7%), 인천(82.8%), 강원(85.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전남지역 빈집(미거주 주택)은 12만6605호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고, 전국 빈집 160만호의 7.9%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다주택자의 증가세 속에서 무주택 가구는 5년 새 1만3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2024년 광주·전남 무주택 가구는 55만2214가구로, 5년 전인 2019년 53만9354가구보다 2.4%(1만2860

가구) 늘었다.

광주 무주택 가구는 25만9588가구로 5년 새 4.6%(1만1409가구) 증가했고, 전남은 0.5%(1451가구) 늘어난 29만2626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무주택 가구는 30대 이하(4.6%), 60대(33.1%), 70대(17.0%), 80세 이상(37.1%)에서 늘었다.

전남 무주택 가구는 20대 이하(12.6%), 60대(24.4%), 80세 이상(7.3%)에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다주택자 수는 1만3918명(14만 9959→16만3877명)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해소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등 연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동영 장관 "대북 무기기 재발 방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기기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이해충돌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지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할

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 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제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쥐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속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후해도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